

## 광주시장 후보 결정 했나요?



### 민주 경선 오늘 시작 ... 20일 결과 발표 1위 과반 못 넘으면 23·24일 결선투표

‘탈당’ 이용섭 10% 페널티 ... 윤장현 사람들 강기정 캠프 합류 변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관련기사 3·5면>

광주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현재까지 야당에서 뚜렷한 대항마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공천이 곧 당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기정·양향자·이용섭(가나다순) 3명의 경선 후보들은 막바지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불출마를 선언한 윤장현 광주시장의 측근들이 경선 하루 전인 17일 강기정 예비후보 캠프에 속속 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더욱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선 어떻게 이뤄지나=18일부터 20일까지 치러지는 경선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샘플 6만개)와 권리당원 ARS투표 50%(4만4000여개)를 합성한 결과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선 결과는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7~8시께 중앙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 과반(50%)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경선 1, 2위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3명의 후보 중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섰던 이용섭 예비후보가 과거 탈당 전력 탓에 경선과 결선투표에서 각각 10% 감소 페널티를 받음에 따라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번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치러지는 결선투표에서 최종 후보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여성가산점 10%를 적용받는 양향자 후보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양 후보는 25%의 여성가산점을 받아야 하지만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을 감안, 이번 경선 가산점은 10%이다.

◇당원 표심 향해 주목=무엇보다도 권리당원의 표심 향배가 주목된다. 광주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수는 4만40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경선과 결선투표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당 안팎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각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지역별 권리당원 조직 등을 흡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민행배·최영호 전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성공한 강기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많은 권리당원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고, 이용섭 후보도 상당수 권리당원의 지지를 얻고 있다. 양향자 후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 권리당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의 지지세의 향배도 주목된다. 경선을 하루 앞둔 17일 강기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하고 “윤장현 시장을 따르고 지지했던 많은 분이 우리 캠프에 합류했다. 이는 윤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송태종 전 정무특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윤 시장 측근의 캠프 합류를 발표했다.

◇후보들 막판 표심잡기 총력전=각 후보들은 1차 경선에 앞서 광주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표심

흡수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후보는 17일 호소문을 통해 “3선 국회의원의 정책 경험과 중앙정치 인맥, 현 정부의 주역들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광주 발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한 손에는 광주정신, 한 손에는 광주 성장을 들고 광주를 새롭게 담당하게 열어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용섭 후보는 “광주 경제가 매우 어렵고, 참으로 다급하고 절실하다”면서 “지금부터 4년간이 광주발전의 골든타임인 만큼 40여년간의 공직과 정치활동으로 다져진 경제적 전문성, 행정능력을 광주 도약에 쏟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양향자 후보는 “위대한 광주가 권리당원 명부 유출과 줄 세우기 정치로 낡은 기득권 정치가 되어 가면서 신음하고 있다”면서 “기득권과 과거의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로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양향자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애인 행사장의 후보들 17일 오전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김영록 ‘굳히기’ 장만채 ‘뒤집기’

민주 전남지사 경선 오늘·내일 결선투표  
‘ARS 지지 호소’ 논란 막판 변수 떠올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를 최종 결정하는 결선투표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1차 경선을 각각 1·2위로 통과한 김영록·장만채 예비후보가 막판 득표활동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신정훈 예비후보의 김영록 후보 지지선언에 따른 표심 향배와 결선투표를 앞두고 불거진 김영록 후보의 선거법위반 의혹이 최종 승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지역 정계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지사 1차 경선 결과 정통 행정관료 출신 김영록 후보와 교육행정가 출신 장만채 후보가 1, 2위를 차지해 막판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결선 투표는 18~19일 양일간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한다.

결선 투표를 앞두고 신정훈 후보의 지지를 얻은 김 후보는 ‘굳히기’ 전략을, 장 후보는 김 후보 측의 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치며 막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1차 경선결과 장 후보를 8%포인트를 앞선 만큼 이번 결선투표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신 후보가 확보해 놓은 27% 가량의 표심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선 결선투표를 하루 앞두고 김 후보 측의 ‘ARS 지지 호소’ 논란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장 후보는 김 후보 측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결선투표 정

점으로 부상시킴으로써 결선 투표에서 ‘막판 뒤집기’ 시도에 총력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ARS 불법 의혹’으로 후보 간 고발에 맞고받, 가져본 검토 등으로 확산되면서 결선투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17일 사실 관계 확인 등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도 장 후보 측 대리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1명이라도 ARS음성이 전달됐다면 위법 사항”이라며 “다만 일반 전담지사 1차 경선 결과 정통 행정관료 출신 김영록 후보와 교육행정가 출신 장만채 후보가 1, 2위를 차지해 막판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결선 투표는 18~19일 양일간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한다.

결선 투표를 앞두고 신정훈 후보의 지지를 얻은 김 후보는 ‘굳히기’ 전략을, 장 후보는 김 후보 측의 선거법위반 의혹에 대해 맹공을 펼치며 막판 ‘뒤집기’ 시도를 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1차 경선결과 장 후보를 8%포인트를 앞선 만큼 이번 결선투표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신 후보가 확보해 놓은 27% 가량의 표심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선 결선투표를 하루 앞두고 김 후보 측의 ‘ARS 지지 호소’ 논란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장 후보는 김 후보 측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결선투표 정

점으로 부상시킴으로써 결선 투표에서 ‘막판 뒤집기’ 시도에 총력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ARS 불법 의혹’으로 후보 간 고발에 맞고받, 가져본 검토 등으로 확산되면서 결선투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17일 사실 관계 확인 등 조사에 착수하고, 검찰도 장 후보 측 대리인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1명이라도 ARS음성이 전달됐다면 위법 사항”이라며 “다만 일반 전담지사 1차 경선 결과 정통 행정관료 출신 김영록 후보와 교육행정가 출신 장만채 후보가 1, 2위를 차지해 막판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 靑,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 수리... “민정 책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원회의 위법 판단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금감원장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임 건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날 김 원장의 낙마와 관련,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원장의 검증 절차 등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국토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실효성 의문

지방채 발행 댐 이자 절반 지원  
광주시 “별다른 도움 안될 듯”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관리지역을 지정하고, 도시공

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절반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몰제 도입까지 2년여가 남는 상황인데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제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국가공원 지정 등을 통해 국가예산 투입을 기대했던 광주시 등 지자체들은 별

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정이 해제되는 도시공원 부지 397km<sup>2</sup> 중 필수적으로 보호해야 할 땅 116km<sup>2</sup>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3.4km<sup>2</sup>가 우선관리지역이다.

국토부가 내놓은 안은 지자체가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간 이자의 절반까지 지원한다는 것으로, 재원 투입은 3300억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가뜰이나 부채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부담을 떠안을지는 미지수다.

광주의 경우 799만3297m<sup>2</sup>를 매입하는데 1조7707억8500만원이 소요된다. 우선관리지역의 토지 보상비는 13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배려교통문화 SOS 캠페인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5 시작해요  
1 오늘부터  
5 서로 배려를

# 배려교통문화

마법처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STOP  
횡단보도에서 차량 정지선 준수하기

운전하거나 걸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안하기

이륜차 탈 때는 안전모 착용하기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불법주정차 신고 APP  
안드로이드 아이폰